

COMMENT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 국회8급 행정학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문제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았고 신경향의 참신한 문제가 상당수 있었지만 체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문11의 규제정치이론사례, 문13의 성과급 비중과 Adams의 형평성 관련 문제 등은 돋보이는 출제였습니다. 지난 국가9급에 이어 이번 국회8급 행정학도 선행정학 강의와 교재에서 100% 출제되었으며 선행정학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국가7급, 서울7급, 지방7급에서도 선행정학 수강생 여러분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 김중규 -

01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
- ② 증권거래세, 증여세, 상속세, 관세
- ③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 ④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 ⑤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해설

① 개별소비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주세는 국세 중 간접세에 해당한다. 국세 중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다.

- ☑ ② [×] 증여세, 상속세는 직접세이다.
- ③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다.
- ④ [×]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는 직접세이다.
- ⑤ [×] 레저세,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목체계

	구분	도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824

02 다음 중 <보기>의 가상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③

<보기>

요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원 관련 허가를 미루려는 A국장의 기이한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국장은 자기 손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업무보고도 과장을 시켜서 하는 등 단체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해외일정을 핑계로 아예 장기간 자리를 뜨기도 했다. A국장이 승인여부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안달이 난 쪽은 다름 아닌 바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국장과 단체장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임기 말에 논란이 될 사안을 결정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자치단체의 일선행정 현장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그 사이에 정부 정책의 신뢰는 저하되고, 신뢰를 잃은 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 ① 업무수행지침을 규정한 공식적인 법규정만을 너무 고집하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한다.
- ②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인 권위의 계층적 구조에서 상사의 명령까지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행태를 말한다.
- ③ 관료들이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며 책임 회피적인 보신주의로 빠지는 행태를 말한다.
- ④ 관료제에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여 조직과 대상 국민에게 순응의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⑤ 기관에 대한 정서적 집착과 같은 귀속주의나 기관과 자신을 하나로 보는 심리적 동일시 현상을 말한다.

해설

- ③ 해외일정을 핑계로 책임과 결정을 미루는 행위 등의 해당 가상 사례는 관료들은 자기유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본질적으로 변동이나 혁신에 적극 저항하고 책임질 일을 화피하는 등 보수성을 띠게 된다는 관료제의 병리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③에 해당한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82

0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은?

«②

<보기>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 ① 과학적 관리론
- ② 공공선택론
- ③ 행태주의
- ④ 발전행정론
- ⑤ 현상학

해설

② 공공선택론은 공공부문에 경제학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접근법으로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관료행태,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 이익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탐색한다.

- ☑ ① [x] 과학적 관리론이란 최소의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the best one way)을 찾아내기 위하여 과학적인 관리 기술을 도입하는 고전적 관리이론이다.
- ③ [x] 행태주의는 행정연구의 과학화를 위하여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는 접근법으로 논리실증주의를 통한 가치중립적, 가치지양적인 연구를 지향한다.
- ④ [x] 발전행정론은 행정이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실천적 전략을 연구하는 개발도상국 용 실용주의 행정이론을 말한다.
- ⑤ [x] 현상학이란 선행정학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으로 행태론의 논리실증주의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외면적 행태만을 고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내부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작용(간주관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이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149

04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 ① 재정건전성의 확보
- ② 국민부담의 최소화
- ③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 ④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 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설

⑤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예산의 원칙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재정법 제16조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607

05 다음 <보기> 중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③»

<보기>

- ㄱ.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
- ㄴ.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 ㄷ.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 ㄹ.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서 주도한다.
- ㅁ. 공식적인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용이하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해설

③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에 대한 내용으로 ㄴ, ㄷ, ㄹ만 옳다.

- ☑ ㄱ [×] 상향적 접근은 제한된 합리성, 적응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입장으로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합리모형의 선형적 시각이란 문제정의→대안탐색→대안분석→대안선택의 일련의 선형적·단계적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하향적 집행과 관련된다.
- ㄴ [o] 상향적 접근은 정책이 실제로 집행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 ㄷ [o] 상향적 접근은 결정자가 모든 집행과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선공무원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중시한다.
- ㄹ [o] 고위직인 결정자의 리더십보다는 하위직인 집행관료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상향적 접근을 유용하게 보는 입장이다.
- ㅁ [×] 하향식 집행의 특징이다. 상향식 집행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무시되므로 집행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구분 \ 유형	하향적·집권적 집행 (top-down)	상향적·분권적 집행 (bottom-up)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적음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 (일원론)
관리자의 참여	참여 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됨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집행의 성공요건	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재량권
핵심적 법률 (법제화)	있음	없음
Berman	정형적(거시적·하향적) 집행	적응적(미시적·상향적) 집행
Elmore	전향적 집행 (forward mapping)	후향적 집행 (backward mapping)
Nakamura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방향과 흐름	집권적, 기계적, 단계적, 연역적, 규범적	분권적, 역동적, 귀납적, 실증적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271

06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는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다.
-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해설

③ 교육·소방·경찰 공무원 및 법관, 검사, 군인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경력직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 ① [오]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제(국가공무원법)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② [오]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국가공무원법 제2조)되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정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적용범위에 보수(제5장)와 복무규율(제7장)을 포함한다.
- ④ [오] 국회수석전문위원은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 ⑤ [오] 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	일반직	행정일반, 연구지도, 기술 분야에 종사
	특정직	법관, 검사, 경찰, 외무, 소방, 경찰, 군인, 군무원, 국정원 직원, 헌법연구관 등
특수경력직	정무직	선거로 취임, 국회의 임명 동의, 정치적 결정 등
	별정직	공정성, 신임, 기밀을 요하는 직위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490

07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

- ①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 ② 재의요구권
- ③ 기금의 설치 · 운용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 ⑤ 청원의 수리와 처리

해설

- ② 「지방자치법」상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의요구권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장이 위법 · 부당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 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 · 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부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 · 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사유

- ①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 ②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된 때
- ③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비상재해 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 ④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 또는 시 · 도 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한 경우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803

08 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 ② 정부조직의 내부성
- ③ 파생적 외부효과
- ④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 ⑤ 비용과 편익의 괴리

해설

- ④ 정부실패는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정성, 정부조직의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편익의 괴리(비용과 수익의 절연)에 의해 발생한다. 점증적 정책결정은 지식과 정보의 불완전성, 그리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을 전제하는 모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원인에 해당하지 정부실패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실패의 원인

시장실패의 원인	정부실패의 원인
① 공공재의 존재	① 내부성(사적 목표)
② 외부효과(외부성)	② 파생적 외부효과
③ 독점의 존재	③ 비용과 수익의 절연
④ 수익의 증가와 비용 감소(과도한 규모의 경제)	④ X-비효율
⑤ 정보의 격차(편재)	⑤ 경쟁의 결여(독점성)
⑥ 소득분배의 불공평	⑥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62

09 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 ①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다 보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은 증가하는 상황
- ②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은 결과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
- ③ 기업체에게 상품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정보량은 줄어들게 되는 상황
- ④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기 설정하다 보면 실제로는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
- ⑤ 소득재분배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해설

- ② 규제피라미드현상은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말한다. 규제는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는 자승자박의 논리가 지배한다.

- ☒ ① [x] 새로운 위험만 규제하면 사회의 전체 위험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설 현상에 해당한다.
- ③ [x] 기업의 상품정보공개가 의무화 될수록 기업은 더 이상 정보공개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정보량이 줄어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
- ④ [x] 규제가 너무 많으면 잘 지켜지지 않아 결국 과도한 규제가 과소한 규제를 초래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
- ⑤ [x] 고용주가 최저임금제의 부담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오히려 줄어들게 만드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한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55

10 다음 중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 ④

- ① 행태주의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 ② 제도주의에서는 사회과학도 엄격한 자연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③ 행태주의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중시한다.
- ④ 각 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 접근의 한 방식이다.
-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해설

④ 역사학적 신제도주의는 국가간의 정책의 상이성을 중시하며 동일목적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을 중시한다.

- ☑ ① [x] 행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여 연구대상에서 가치를 배제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나 가치판단 문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합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간을 물질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과 같은 인본주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는다.
- ② [x] 제도주의가 아니라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동일시하여 자연과학적인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하는 행태주의적 접근법이다.
- ③ [x] 행태주의가 아니라 1960년대 말 미국 사회의 격동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의 실천성 및 적실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후기행태주의의 입장이다.
- ⑤ [x] 행태주의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일반법칙적인 연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실천성과 적실성이 결여된 보수적인 경향의 접근법으로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지 않는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162

11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치이론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①

- ① 대중정치
- ② 기업가정치
- ③ 이익집단정치
- ④ 고객정치
- ⑤ 소비자정치
- ⑤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행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해설

- ①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규제의 편익(교통 소통 향상으로 인한 편리함)이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규제의 비용(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 역시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 ☑ ② [x] 기업가정치는 비용은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나 편익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로 환경오염규제, 안전규제 등 재분배정책이나 사회적 규제 등이 해당한다.
- ③ [x]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된 것으로 노사규제, 의약분업규제 등이 해당한다.
- ④ [x] 고객정치는 규제의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산되어 있으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에게 귀속되어 크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수입규제,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등이 해당한다.
- ⑤ [x]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소비자정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규제의 편익	
		집중	분산
규제	집중	① 이익집단 정치	② 운동가의 정치 (기업가적 정치)
비용	분산	③ 고객의 정치	④ 다수의 정치

- ① 첨예한 대립 : 어느 쪽도 1/N 없음 (예 : 의약분업 등)
- ② 소수 피해집단의 반대로 규제 채택이 곤란 (예 : 환경오염규제)
- ③ 소수 수혜집단의 강력한 로비로 규제 채택이 가장 용이 (예 : 진입규제 등)
- ④ 양측에서 1/N 발생 : 공익단체의 활동으로 문제 제기 (예 : 음란물 및 차별규제 등)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57

12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 ① 직위해제 :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 ② 직권면직 : 직제 ·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 ③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 ④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 ⑤ 정직 :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해설

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 6월간 승급이 정지된다.

- ☑ ① [x] 직위해제는 신분을 박탈하지는 않으며,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로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 ② [x] 직권면직은 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폐직)나 초과정원(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권으로 면직(신분 박탈)하는 인사 처분을 말한다.
- ③ [x]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금품 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내지 1/4이 지급 제한될 수 있다.
- ④ [x] 파면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의 1/4 내지는 1/2 지급이 제한된다.

징계의 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감봉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정직	1~3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강등	1계급 하향조정,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전액을 삭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해임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원칙상 영향 없음
파면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558

13 다음 중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보수체계 설계 시 성과급 비중을 설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론은?

«①

-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
- ② 허즈버그(Hezberg)의 욕구충족이론
- ③ 앨더퍼(Alderfer)의 ERG(존재, 관계, 성장)이론
- ④ 머슬로(Maslow)의 욕구 5단계론
- ⑤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

해설

① 애덤스(Adams)의 형평성이론은 현대인의 형평관념에 맞는 공평한 성과보수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운 이론으로 개인은 준거인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력(투입)과 그 산출(보상)간에 상대적 형평성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과 신념이 직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즉,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보상) 간의 비율이 준거인(비교인물)의 비율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공평을 지각하게 되고 이러한 불공평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37

14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②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 ③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 ⑤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④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 ① [o] 시·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서명인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② [o]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주민소환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o]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다.
- ⑤ [o]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845

15 다음 중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⑤»

- ① 명사이월
- ② 예비비 사용
- ③ 예산의 이용
- ④ 계속비
- ⑤ 예산의 이체

해설

⑤ 예산의 이체는 국회의 사전의결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체란 회계연도 중에 정부조직개편 등에 의해서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국회의 별도 승인이나 의결이 필요가 없다. 국회의 사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이용, 국고채무부담행위, 기금, 명사이월, 예비비의 설치 등이 있다.

☒ 예산과 국회의 의결

사전의결 필요	① 세입세출예산 ② 계속비 ③ 이용 ④ 국고채무부담행위 ⑤ 기금 ⑥ 명사이월 ⑦ 예비비의 설치
사전의결 불필요	① 준예산 ② 사고이월 ③ 재정상 긴급명령 ④ 이체 ⑤ 예비비 지출 ⑥ 전용
사후승인 필요	① 세입세출 결산 ② 계속비 결산(완성연도) ③ 예비비 지출(예비비 사용명세서)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605

16 다음 중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서 강조하는 네 가지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 ① 재무적 관점
- ② 프로그램적 관점
- ③ 고객 관점
- ④ 내부프로세스 관점
- ⑤ 학습과 성장 관점

해설

② 균형성과표(BSC)는 하버드 대 Kaplan & Norton 교수가 만든 경영성과관리시스템으로 4대 관점에는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업무처리과정 관점(프로세스 관점), 학습 및 성장관점이 있으며 프로그램적 관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균형성과표(BSC)의 지표별 특징과 내용

관점(지표)	특성	내용(예)
재무적 관점	민간부문에서 중시하는 전통적인 후행지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대비차이 등
고객 관점	공공부문이 중시하는 대외적 지표	고객만족도, 정책수용도, 민원인의 불만율, 신규 고객의 증감 등
프로세스(절차) 관점	업무처리관점 과정중심 지표	의사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적법적 절차, 커뮤니케이션(소통) 구조 등
학습과 성장 관점	미래적 관점의 선행지표	인적 자원의 역량, 지식의 축적, 정보시스템 구축, 학습동아리 수, 제안 건수, 직무만족도 등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459

17 다음 중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⑤

- ① 직위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 ② 직급 :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 ③ 직렬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 ④ 직류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 ⑤ 직군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해설

⑤ 직군이 아니라 등급에 대한 설명이다. 등급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 · 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직위의 횡적인 군)을 의미하며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한다.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 · 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 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 · 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498

18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보기>

- ㄱ.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육체적 능력보다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 ㄴ.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ㄷ. 체제론은 비계서적 관점을 중시한다.
- ㄹ. 발전행정론은 정치, 사회, 경제의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해설

① ㄱ, ㄴ만 옳다.

- ☑ ㄱ [○] 인간관계론에서 조직 참여자의 생산성은 경제적 보상이나 육체적 능력보다 인간관계에 의한 사회적 규범(집단 규범)에 의해 좌우된다.
- ㄴ [○]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the best one way)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 ㄷ [×] 체제론은 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체제나 현상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배열이 계층적이라고 보았다. 즉, 체제 간에도 상위체제 > 중간체제 > 하위체제의 계층적 서열이 존재한다는 계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 ㄹ [×] 발전행정론은 정치·경제·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행정체제가 다른 분야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불균형적 접근법을 중시한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120

19 다음 중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관료의 총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② 조직 내의 모든 결정행위나 작동은 공식적으로 확립된 법규체제에 따른다.
- ③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하는 계층제의 원리에 따라 조직이 운영된다.
- ④ 민원인의 만족 극대화를 위해 업무처리 시 관료와 민원인과의 긴밀한 감정교류가 중시된다.
- ⑤ 조직 내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④ 베버(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는 감정과 편견 등이 배제된 비정역적인 형식주의정신에 입각하여 객관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 ① [오] 이념형 관료제는 실적과 능력에 따른 임용을 중시한다.
- ② [오] 합법적으로 제정권 법규에 의한 지배를 추구한다.
- ③ [오] 계층제에 의한 상명하복에 따라 조직을 운영한다.
- ⑤ [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에 의한 행정을 중시한다.

근대관료제의 특징

특징	병리
① 계층제	① 민주성·대표성 제약
② 법 앞의 평등	② 동조과잉(목표 전환)
③ 문서주의	③ 번문욕례
④ 공·사 분리	④ 인격 상실
⑤ 전문지식(실적관료제)	⑤ 전문가적 무능
⑥ 전임직(직업관료제)	⑥ 할거주의
⑦ 비개인화(impersonalism)	⑦ 변동에 대한 저항
	⑧ 독선주의, 기밀주의
	⑨ 피터의 원리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382

20 다음 중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 ① 성숙효과 : 정책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두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 ② 회귀인공요소 : 정책대상의 상태가 정책의 영향력과는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평균값으로 되돌아가는 경향
- ③ 호손효과 :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
- ④ 혼란변수 : 정책 이외에 제3의 변수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책의 영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 ⑤ 허위변수 : 정책과 결과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나 마치 정책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변수

해설

- ③ 정책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영향력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은 크리밍 효과이다. 호손효과는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감각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타당도 저해요인

	저해요인	개념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성숙효과	순전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난 대상집단의 특성변화, 즉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에 의한 효과
	회귀인공요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초 극단적인 성향의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덜 극단적인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로서 실험 직전의 측정결과나 단 한 번의 측정만으로 집단 구성 시 발생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호손효과	실험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감각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으로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
	크리밍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양호한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 곤란

참고

2018 9급 선행정학 p.304

21 다음 중 탈신공공관리론(post-NPM)에서 강조하는 행정개혁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 ① 분권화와 집권화의 조화
- ② 민간-공공부문 간 파트너십 강조
- ③ 규제완화
- ④ 인사관리의 공공책임성 중시
- ⑤ 정치적 통제 강조

해설

③ 시장지향주의와 규제완화(탈규제, 탈정치)를 강조한 이론은 신공공관리론으로 탈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 역량 강화의 재규제, 재정치, 정치적 통제를 강조하였다.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	탈신공공관리론
정부시장관계	시장지향주의 규제완화 (탈규제, 탈정치)	정부 역량 강화 - 재규제, 재정치 - 정치적 통제 강조
행정가치	능률, 성과 등 경제적 가치 강조	민주성·형평성 등 전통적 가치도 고려
정부규모	정부규모의 감축, 시장화·민영화	민간화·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기본모형	탈관료제 모형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조화
조직구조	유기적·비계층적·임시적·분권적구조	재집권화 - 분권과 집권 조화
조직개편	소규모의 준자율적 조직으로 분절화	구조적 통합을 통하여 분절화 축소 ⇨ 총체적·합체적 정부
통제	결과·산출중심 통제	과정과 소통 중심
인사	경쟁적·개방적인 성과중심 인사관리	공공책임성 중시
재량	넓은 재량	재량필요+제약·책임
관리	자율과 경쟁	자율과 책임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183

22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 ③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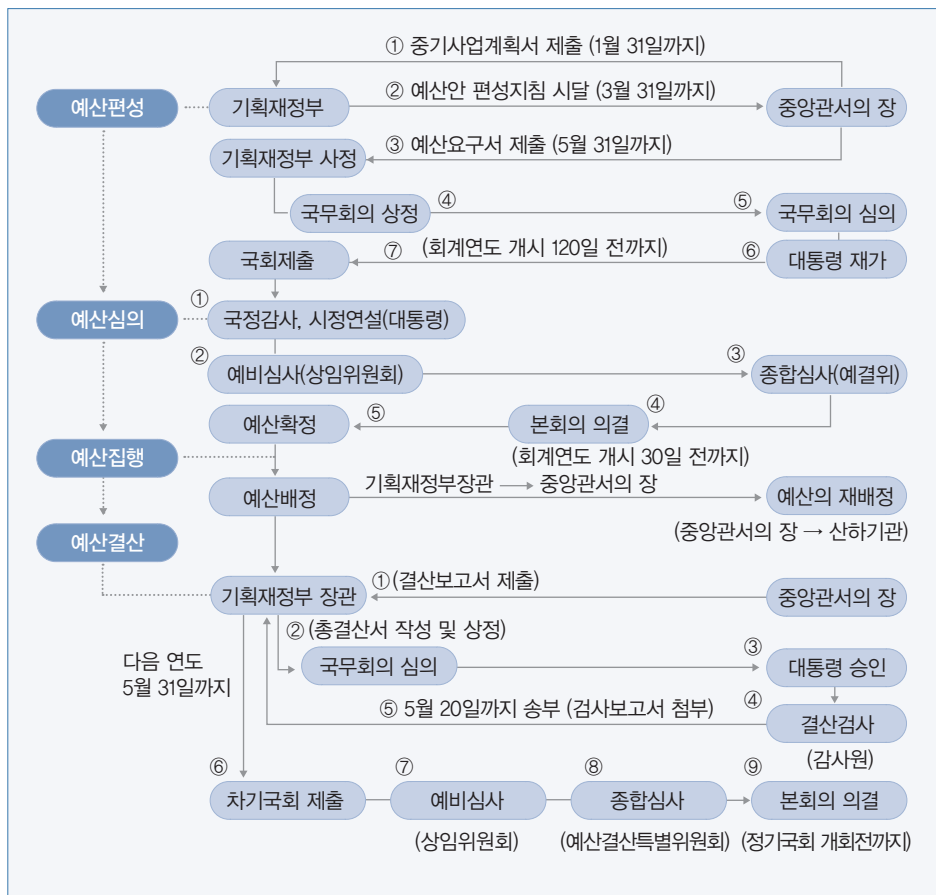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국가재정 운용계획
- ②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③ 예산안편성지침
- ④ 총사업비 관리지침
- ⑤ 예산요구서

해설

③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서 예산편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예산과정(국가재정법)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666

23 다음 중 근무성적평정제도에서 다면평가제도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 ① 직무수행 동기 유발
- ②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③ 자기역량 강화
-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
- ⑤ 평가의 수용성 확보 가능

해설

- ④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 측정은 역량평가에 해당한다. 역량평가는 일종의 사전적 역량검증장치로 단순한 과거의 근무실적 등을 사후에 평가하는 근평과 달리 공무원이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평가결과가 유인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 ☑ ① [○] 다면평가는 공정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구성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를 지닌다.
- ② [○] 다면평가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킨다.
- ③ [○] 다면평가는 평가결과 및 구성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환류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에 활용한다.
- ⑤ [○] 다면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 쉬워 평가의 수용성 확보가 가능하다.

다면평정의 장단점

장점	① 능력발전 : 구성원의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②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제고 : 피평정자들의 승복 ↑,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개인 편차를 줄임 ③ 충성심의 다원화 : 특정 상관에 대한 충성을 국민중심적인 것으로 전환 ④ 분권화 촉진 ⑤ 민주적 리더십 발전 ⑥ 공정한 평가로 동기유발과 자기개발 촉진
단점	① 갈등과 스트레스 ②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소모 ③ 형평성·신뢰성·정확성 저하 우려 : 평정 참여자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담합에 의한 평정 ④ 포퓰리즘으로 인한 목표의 왜곡 : 대인관계에만 급급 ⑤ 피평정자의 무지와 일탈된 행동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541

24 다음 중 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의 개념은?

«①

- ① 내용타당성
- ② 구성타당성
- ③ 개념타당성
- ④ 예측적 기준타당성
- ⑤ 동시적 기준타당성

해설

- ① 내용타당성은 시험내용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대표)할 수 있는 정도로 맞는 지문이다.
- ☒ ② [x] 구성타당도는 시험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의미한다.
- ③ [x] 개념타당도는 내용타당성이나 기준에 의한 타당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도구가 얼마나 적절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타당성이다.
- ④ [x] 예측적 기준타당성은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가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 ⑤ [x] 동시적 기준타당성은 사용을 앞둔 시험을 재직 중에 있는 현 재직자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근무성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517

25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②

<보기>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 ①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 ②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 ③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 ④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 ⑤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해설

② ㉠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정책의 효과가 사회 전체에 파급되므로 환경에 많이 의존하며, 저항과 반발이 심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강제적·집권적으로 추진된다.

- ☒ ① [×] 분배정책
 ③ [×] 구성정책
 ④ [×] 분배정책
 ⑤ [×] 규제정책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주도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게임의 법칙	정당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개별화 정책)	SOC, 보조금 등	포크베럴, 로그롤링	의회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 지대추구)	이익집단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엘리트이론	엘리트

참고

2018 7급 선행정학 p.193